

이달 중 자율·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나온다

고용노동부 3차 대국민 토론회
규제 위주 정책 패러다임 전환
현장 전문가, 국민 의견 수렴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지난 달 20일 고용노동부 주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차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안전공학과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정부는 SPC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후 사업주를 처벌하기보다 사고 전에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사고 후 수습보다 사고 전 예방에 주력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20일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차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임을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도 구축하며, 정부는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산재사망 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5년 내 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장은 "기업이 자율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철저히 사고를 예방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소 기업에는 자체적 안전보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달 18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규제들이 기업의 책임 하에 현장 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고 견의한 것과 맥이 달다.

실제 영국과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

국 사례를 보면 이미 산재 예방을 위해 '민간 주도적' 안전 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7년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살인죄'를 제정할 정도로 산재 규제에 엄격했다. 하지만, 규제 중심의 정책은 산재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은 기업 책임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10일 마지막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에 대한 산업현장 안전담당자와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정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추진… 전기요금 등 인센티브

산업부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간담회
특정지역 편중 부작용 해소 나서
금융·세제 등 패키지형 지원 방안 검토

정부가 지난달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대란'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입지 문제를 높이는 대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역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호현 전력 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 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해

계통·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 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

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데이터 안전 및 보안 ▲전력 계통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선 지난달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일상 생활 전반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감성이 커진 상태다.

또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계통혼잡 유발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데이터센터가 향후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등 신산업과 연계해 실시간 저장·공유 등으로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품질과 가격 측면의 장점 등으로 국내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2021년 기준 한국의 호당 정전 시간은 연간 8.9분으로, 미국(47.3분), 영국(38.4분), 독일(10.7분) 등과 비교해도 전력품질이 좋고, 산업용 전력 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83% 수준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부발전, 빛고을에코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 개최

연간 약 100GWh 생산·공급 예정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8일 광주광역시 하수처리장 유류부지에 건설된 연료전지 발전소 현장에서 열린 '빛고을에코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중부발전·SK가스·두산건설·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에코에너지(주) 연료전지 발전소는 약 18개 월간의 건설을 통해 지난 9월 준공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상업운전 중이다. 특히 LPG와 LNG 두 가지 연료 사용이



빛고을에코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

모두 가능한 LPG-LNG 듀얼타입 연료전지를 개발·적용해 향후 30년간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해 인근 아파트 단지 820세대 및 광주광역시청 등 주변

지역 약 26개 기관에 열을 공급, 약 3만 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 연간 약 100GWh 전력을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농어촌공,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나서

국민 불편 해소… 공공서비스 질 제고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 및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해왔으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필요성 입증 등을 국민·고객이 아닌 공사가 수행하는 것을

규제혁신 28건 중 대표적 사례로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에 대한 임대 기한 연장 및 보증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진행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편의를 증진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7건 중 법 정서류 제출을 전산화하고, ICT 기술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책보' 사례는 농식품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버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앤디 김 당선 확정… 26년만에 한인 3선 하원의원 탄생

/사진 뉴시스

▲ 日, 열도 동쪽 대형 지진 대비 '후발 진 주의 정보' 운용

▲ 中 코로나 신규 1346명·총 6359명… 5개월 13일째 사망 제로

▲ 전쟁 길어지면서… 우크라 영공 방어 공방전 갈수록 치열



▲ 유럽 잇따라 개도국에 기후변화 피해 보상 약속… 미국은 '침묵만'

▲ 젤렌스키, COP27서 "평화 없인 기후 정책도 없어… 러 전쟁 끝내야" /사진 뉴시스